

# 국방·외교부 장관 불출석 통보... 대정부질문 5시간 연기

REAIM 행사 참석 위해 불참  
오후 2시 예정서 19시·21시로 미뤄  
野 “尹, 개원식 사상 초유 불참 이어  
국회·국민 무시하는 반헌법적 태도”  
與 “장관 참석 못하면 차관 대리 참석  
양당 원내대표·국회의장 허락 얻어”



여야가 조태열 외교부·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국회 대정부질문 불출석 문제를 놓고 충돌하면서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7시로 연기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본회의장 문이 굳게 잠겨 있다. /뉴스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0일 행사 참여로 같은 날 열리는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하겠다고 알리자 야당이 이에 반발하며 대정부질문 시작 시간을 5시간 연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김 장관과 조 장관은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리는 '2024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에 불참한다고 통보했다. 대정부질문엔 장관 대신 차관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정부질문 질의자였던 정동영·한정애·이재정·박선원·김영배 민주당 의원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을 찾아 두 장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사상 초유로 참석하지 않더니 그에 이어서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노골적인 반헌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두 장관의 출석을 요구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두 장관은 처음으로 대정부 질의에 나오는 것”이라며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얼굴을 보

지 않겠다, 그것도 하루 전날 밤에 못나오겠다는 것은 국회에 대한 능멸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반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추 원내대표는 “아시다시피 대정부질문에 대한 국무위원 출석 여부는 일

찍이 본회의를 통해서 결정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양당 교섭단체의 승인과 동의를 받아서 불출석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이 참석하지 못하면 차관이 대리 참석한다”며 “국방, 외교부 장관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불참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제가 파악해보면, 국방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주관하는 90여개국 정부 대표단이 참석하는 국제회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늘 참석하기 어렵겠다고 알고 있고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의 허락을 얻어서 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도 기자들에게 공지문을 보내 “REAIM 고위급 회의는 국제사회 최대 화두인 인공지능(AI)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국방 AI 혁신을 위한 기반 조성 마련을 위한 회의로,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80여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40여개국 장관이 참여하는 행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교부의 경우,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요청을 했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 3일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

해 확인서에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양해 확인서를 외교부 측에 전달했고 이에 국민의힘도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대리출석 양해 확인을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장관 불출석과 관련해서도 “지난 6일 국방부 장관이 임명된 후, 국방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측에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를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검토하여 회신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이후, 어제인 9일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직인을 찍어 국방부 측에 전달했고 직후 국민의힘도 원내대표의 직인을 찍어 대리출석 양해 확인을 했다”고 말했다.

결국, 대정부질문은 오후 2시에 시작되기로 했지만, 이를 5시간 늦춰 오후 7시에 열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두 장관의 불참이) 윤석열 정부 흐름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연기하거나 시간을 조정하거나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었고, 다행히 그게 반영돼서 오늘 7시로 (대정부질문이) 조정됐다”며 “외교부 장관은 7시에 맞춰 출석하고, 국방부 장관은 9시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진성준 “정부 연금개혁, 세대 갈라치기...尹, 의료대란 사태 사과해야”

(민주당 정책위의장)

보험료 인상·연금 삭감 동시 추진  
연금재정 안정 위해 국민 희생 강요  
尹, 의료계 입장 수용 태도 보여야



행9%에서 13%로,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42%로 인상하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세대 갈라치기’라고 규정했다. 이는 이번 연금개혁안에 도입한 재정 자동안정화 장치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은 10일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세대를 갈라치는 정부 동의안은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의료 대란과 관련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가 요구하는 ‘대통령의 사과’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열린 태도가 의료계를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여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강선우·이정문 의원과 함께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연금개혁안과 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보험료율을 현

진 정책위의장은 “본질은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은 덜 받고 하는 것”이라며 “보험료 인상과 연금 삭감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겠다고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자동안정화 장치에 대해 “향후 청년 세대에 대한 연금 삭감 피해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연금의 재정 수지가 악화되는 시기에 본격 작동시킬 거란

계획인데, 이 시기가 지금의 청년 세대가 연금을 받게 되는 시기하고 겹쳐 피해가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에 대해선 “차등 보험료율이 적용될 경우 중장년층의 대규모 실업이 우려된다”며 “(중장년층이) 50대에 퇴직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 보험료율이 높으면 이를 똑같이 부담해야 될 기업이 고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선우 의원도 “어떤 해에 태어났느냐에 따라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당장 13%를 내라는 것인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대한민국에서도 선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번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합의한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진 정책위의장은 의료대란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의료계의 요구는 ▲대통령의 사과 ▲정책 책임자에 대한 문책 ▲의대 정원 논의 원전 재검토 세 가지로 집약되는 것 같다”며 “정부가 의료 대란을 불러일으킨 것에 사과하고 그 책임자에 대해 분명하게 문책함으로써 의료계를 좀 달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료계를 우선 여·야·의·정 협의체로 불러 의료 대란 수습을 위한 타협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졸속 정책으로 의료 대란을 초래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진 정책위의장은 의대가 지난 9월 2025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를 시작한 사실을 거론하며 “내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부가 그것은 안 된다고 선을 그어버리면 의료계와 어떻게 대화가 가능하겠나”라며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든 수용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정부가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추진과 관련해 의료계에 합리적인 근거를 대 의료계를 납득시키는 등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강 의원은 “2025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과정을 정부가 (의료계에) 합리적인 근거를 내놓고 설득해야지 2025년도 증원 의제를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부연했다.

/윤도현 기자 yunbgb0611@

# 尹 “추석연휴 건강보험 수가 대폭 인상... 日 출입국 간소화”

권역응급의료센터 진찰료 3.5배 올려  
한일정상회담으로 관계개선 성과 소개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한시적으로 진찰료·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고,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면서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의 걱정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됐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지원 계획을 설명했다. ‘응급실 뺨뺨이’로 인한 사망이 연이어 알려지며, 추석 연휴 기간 의료공백을 걱정하는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함으로 보인다. 또한 단순히 병·의원을 동원해 당직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 ‘공정한 보상’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내일(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연휴 비상응급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4000개소 이상의 당직의

료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마지막 한일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와 인적교류 증진을 위해 추진기로 한 출입국 간소화 조치가 일본을 찾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라며 “각 부처는 양국 간 협력 사업과 정부 간 대화체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우리 국민들이 한일관계 개선의 효과를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지시했다.

/서예진 기자 syj@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뉴스시